내일 민주 전대…주류-비주류 싸움 격화

당 선관위 문자메시지 금지 공문 관련 거센 충돌

이용섭 "대표되면 광주 지역구 출마 포기" 배수진

민주통합당의 전당대회를 이틀 앞두고 당권을 둘러싼 친노(친노무현) 등 주류와 비주류 진영의 경쟁이 가열되고 있다. 상대 후보에 대한 공격과 비판이 격화되면서 전당대회 이후를 우려하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이런 가운데 투표율이 과거 전대보다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자 두 후보 측은 전당대회 당일 현장에서 실시되는 대의원 투표(전체 경선 반영 비율 50%)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우선 김한길, 이용섭 두 후보는 2일 불법선거운동 논란을 놓고 정면충돌했다.

당 선관위가 권리당원 ARS투표 및 여론조사 기간 문자메시지를 금지하겠다는 공문을 발송하자 이 후보 측이 전날 '김 후보 측이 문자메시지를 발송해 불법선거운동을 했다'고 주장한 게 발단이 됐다.

논란이 확산되자 김 후보는 기자회견을 자청, "선관위도 '문자메시지 발송 금지' 내용은 논의되지 않았음을 공식 확인했다"며 "이 후보 측은 근거없는 음해를 중단하라"고 반격했다.

김 후보는 한 발짝 더 나아가 범주류 단일화를 '계파주의 부활'로 규정하며 "계파정치 행태가 다시 고개를 들고 당원의 선택권을 제약하는 줄 세우기 징조가 보인다"고 친노를 정조준하며 공격했다.

이에 대해 이 후보 측은 "실무자의 착오로 공문이 잘못 발송됐더라도 이를 준수한 후보와 그렇지 않은 후보 간의 형평성 문제는 남아 있다"며 전날 실시된 당원투표 무효화 및 재투표 실시를 요구했다.

특히, 이용섭 후보는 지난 1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김 후보가 당선되면 무소속 안철수 의원과 새로운 세력을 도모할 가능성이 있다며 이른바 '제휴설'을 고리로 공격의 날을 세웠다.

이에 김 후보 측 관계자는 "당을 분열시키려는 친노 측의 패권주의적 네거티브 전략"이라며 "대응할 일고의 가치가 없다"고 불쾌감을 감추지 못했다.

이처럼 양측 간의 감정 섞인 대결만 부각되면서 국민 및 당원들의 관심은 점점 더 낮아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를 반영하듯, 이틀 일정으로 지난 1일 시작된 권리당원 ARS 투표의 투표율이 첫날 중간 집계결과 20.2%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당내에선 ARS 투표율이 30% 안팎에 그치지 않느겠냐는 전망이 나온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전대 당일 치러지는 대의원 및 당원의 투표도 부진을 면치 못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양측은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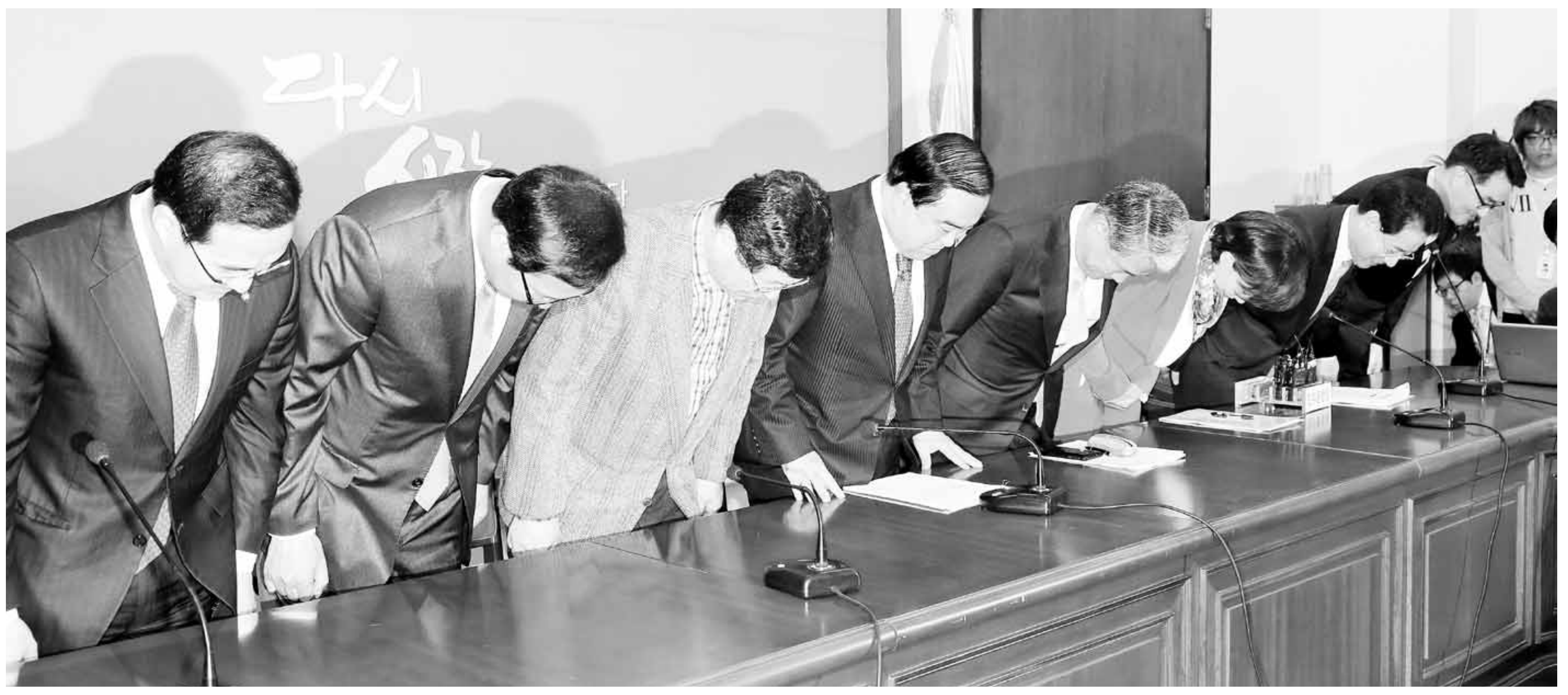
투표율이 낮을수록 조직 결속력이 공고한 범 주류측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것이 당내 대체적 전망이어서 대표 경선 결과는 투표함을 까봐야 알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당내 친노 인사들은 지난 29일에 이어 이날도 오찬 회동을 열어 결집을 시도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용섭 후보는 지난 1일 기자회견을 열고 대표에 당선된다면 차기 총선에서 현재의 지역구에서 출마하지 않겠다는 '조건부 불출마'를 선언하며 배수진을 쳤다.

당원과 대의원 표심을 겨냥한 이날 선언은 '대표 당선'이라는 조건이 전제되어 있어 효과 측면에서 일정 부분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5·4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는 문희상 민주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을 비롯한 비대위원들이 2일 오전 국회 당대표실에서 비대위 활동을 결산하는 기자간담회를 마친 후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막 내리는 '문희상 비대위'

"내 점수는 F학점…계파싸움 뿌리뽑지 않으면 한발짝도 못나가"

18대 대선 패배 후유증 극복을 위해 출범한 민주통합당 문희상 비상대책위원회 체제가 5·4 전당대회를 마지막으로 활동을 마감한다.

문희상 체제는 위기의 당을 수습하고 재기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는데 역점을 둬왔다.

제일 먼저 착수한 일은 대선 패배에 대한 명확한 진단과 분석작업이었다. 하지만, 대선평가위가 두 달여 간의 작업 끝에 내놓은 대선평가보고서는 공정성과 객관성 공방에 휘말리면서 그 취지와 의도를 제대로 살려내지 못했다는 평가가 많다. 특히 친노(친노무현)·주류 진영이 강력 반발하면서 계파 간 갈등을 부추기는 결과를 낳았다.

문희상 체제의 또 다른 활동 축이었던 정치혁신위원회와 전당대회준비위원회도 나름대로 정치혁신안을 내놓고, 당헌·당규를 개정하며 재도약을 위해 부심했지만 기대 만큼 성과를 거두지는 못했다는 지적이다. 중도주의 노선을 보강하고 각종 개혁안을 제시하며 외연을 넓히려고 노력했지만 계파 간 갈등에 파묻히고 말았다. 계파갈등의 뿌리를 뽑겠다는 비대위의 약속은 사실상 공염불이 된 것이다.

다만, 문희상체제는 과거와 달리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한다는 야당의 부정적 이미지를 상당히 탈색시켰다는 평가가 당 안팎에서 나온다. 북한의 3차 핵실험과 잇따른 도발 위협, 개성공단 폐쇄 위기 국면을 접하면서 초당적으로 협력하는 모습을 보여줬다. 4월 중순에는 박근혜 대통령의 초청에 응해 두 차례나 당 지도부와 소속 의원들이 청와대에서 만찬회동을 하며 할 말은 하고 협조할 것은 협조하는 '유연한 야당'의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다. 문 비대위원장은 2일 국회 당 대표실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비대위 활동에 대해 스스로 점수를 매긴다면 F학점"이라면서도 "혁신과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해 열심히 했다는 것은 분명하다"고 말했다.

문 위원장은 또 "성숙한 야당의 기본은 이분법에서 벗어나는 것"이라며 "아무 짝에도 소용없는 20세기적, 냉전적 사고로 당내에서 계파싸움을 하고 여야가 싸우고 사회 전체가 싸우는 것을 뿌리뽑지 않으면 한 발짝도 못 나간다"고 강조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개성공단 7인 오늘도 귀환 불투명

"북과 실무협의는 계속 진행"

개성공단에 남아서 북한과 실무협의를 진행중인 우리 측 인원 7명이 2일에도 귀환하지 못했다. 정부 당국자는 이날 "오늘 우리 측 인원의 귀환은 이뤄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북한과의 실무 협의는 계속 진행한다"면서 "아쉽게도 내일 우리측인원 귀환 여부에 대해서도 현재까지 결정된 것은 없다"고 전했다.

이에 앞서 북한 근로자의 3월분 임금 지급, 미납 세금 납부 문제 등을 둘러싼 남북간 실무협상은 상당히 진전된 것으로 전해졌으나 이날 중 타결은 되지 못했다. 개성공단에는 우리 측 대표인 홍양호 개성공단관리위원장 등 7명이 마지막까지 남아서 북측과 실무협의를 벌이고 있다.

한편 정부는 이날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의 긴급 유동성 지원을 위해 1단계로 총 3000억원 규모의 운전자금을 지원키로 했다.

정부는 우선 피해가 발생한 입주기업에 630억원 규모의 남북협력기금 특별대출을 금리 2% 수준으로 지원키로 했다. 또 1000억원 규모의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을 금리 2% 수준으로 지원하는 한편 '정책금융공사 온렌딩'(1000억원),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특례보증'(369억원) 등을 통한 지원도 실시하기로 했다. 오는 6일께부터 수출입은행 등을 통해 지원 신청은 이뤄진다. /연합뉴스

민주 원내대표 경선 15일 실시

김동철 의원 출마 결심 굳혀 우윤근·전병헌 '3파전' 예상

민주통합당은 오는 15일 새 원내대표 경선을 실시한다.

당 '원내대표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인 한정애 의원은 2일 "6~8일 후보 등록을 받은 뒤 15일 정견발표를 거쳐 새 원내대표를 선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신임 원내대표는 박기춘 원내대표에 이어 1년간 제1야당의 원내사령탑으로서 5·4 전당대회에서 뽑히는 새 대표와 함께 '투톱' 체제를 구축, 원내 전략을 진두지휘하게 된다.

현재로선 이미 출마의사를 표시한 우윤근·전병헌 의원 외에 김동철 의원이 출마 결심을 굳혀 3파전으로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김 의원은 이날 "엄중한 시기를 맞은 당에 비상한 지도력이 필요하다"며 "전당대회가 끝나면 출마를 공식 선언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같은 광주·전남 의원인 우윤근 의원과 후보단일화 여부에 대해서는 "인위적 단일화는 명분도 없고 바람직하지도 않다"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단일화가 이뤄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박근혜 정부 수도권 규제 완화 규탄"

광주시·전남도의회 성명

광주시의회와 전남도의회가 박근혜 정부의 수도권 규제 완화 움직임에 대해 강하게 규탄하고 나섰다.

전남도의회(의장 김재무)는 2일 성명서를 통해 "박근혜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경제활성화라는 핑계로 수도권 규제 완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눈 앞의 단기적인 수도권 위주의 경제부양에만 매달린 근시안적인 정책 추진은 양극화 문제만 반복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광주시의회(의장 조호권)와 전국균형발전지방의회협의회는 1일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추진 중단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강운태 시장 '허균 호민론' 강조 왜?

"갈등과 분열은 파멸의 길"…미래지향적 사회 언급

강운태 광주시장이 조선시대 사상가이자 문인인 허균의 '호민론(豪民論)'을 강조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강 시장은 2일 광주시청에서 열린 '5월 중 정례회의'에서 허균이 호민론을 통해 항민(恒民), 원민(怨民), 호민(豪民) 등 백성을 3가지로 분류한 사실을 언급하며 "광주는 미래지향적인 호민이 많은 도시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강 시장은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의 무관심한 삶을 살아가는 항민이 많은 사회는 도도한 역사의 물결 속에서 조용히 도태하고, 매사에 불평불만만 늘어놓고 대안을 내놓지 않는 원민이 많은 사회는 갈등과 분열 속에 파멸의 길을 걷게 된다"고 지적했다.

강 시장은 "미래지향적이고 늘 내일을 준비하고 노력하는 호민이 많은 사회는 미래의 승자가 될 것"이라며 "광주 공동체는 호민이 많은 도시가 됐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강 시장의 이 같은 언급은 최근 무등산 국립공원 승격, 수출액 부산 추월, 신규 일자리 증가 등 여러 시정성과에도 불구하고, 일부에서 특정 시정을 반대·비난하고, KTX 정차역을 놓고 지역내 갈등이 발생하는 것 등에 대한 우려 차원의 말로, 광주 공동체가 화합해 미래지향적으로 발전해야 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박진표기자lucky@kwangju.co.kr

www.semenergy.co.kr / greenpw.co.kr 태양광 R.P.S사업부
"햇빛 재태크" 소용량(10~30kw)태양광 발전사업 40kw 이상 대용량 설치 가능
희망찬 노후를 설계하세요!

태양광 RPS발전사업이란?
사업주께서 건물(옥상) 또는 대지에 발전사업 설비용량에 따른 적정한 금액을 투자하여 태양광 발전 시스템을 시공하여 생산된
신재생에너지(전기)를 한국전력공사와 계약하여 판매하는 제도

태양광 발전사업자 수익금
(은행 예치 대비 태양광 설치 시 약4.5배 이상 기대)
년 480만(예상수익) 10kw 소용량 발전사업 월 수익 약 400,000원 예상
년 960만(예상수익) 20kw 소용량 발전사업 월 수익 약 800,000원 예상
년 1440만(예상수익) 30kw 소용량 발전사업 월 수익 약 1,200,000원 예상
※인증서 판매가격:입찰을통하여 결정

태양광주택발전(주택용) 설치후 효과 자부담 550~680만원
기존 전기료의 약 80% 절감효과
설치비용은 1년거치 5년상환제로 결제가능(농협특화사업)
3개월 무이자가능(cnh할부)
※ 3kw용량의 발전설치시 월평균 약300~400kw의 전력이 생산가능하고 사용량이 많을수록 더욱 절감 됩니다.
(주)셈에너지 그린파워 광주 총판 TEL.1577-8905 019-624-2371
광주광역시 북구 신안동 149-3 1F

NPL(부실채권)과 특수물건만 취급
(주)오천경매
→ 비법 배우면서 투자
→ 실전 사례 교육
→ 1인 1물건 추천
→ 단독/공동투자 가능
→ 개인지도 1,100만원
→ 문의 010-3605-5000